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2
----------	------

발의연월일 : 2024. 6. 27.

발 의 자 : 김교홍 · 모경중 · 허종식  
이훈기 · 박선원 · 이용우  
노종면 · 유동수 · 정일영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 · 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 ·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 ·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장).
- 1)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 2)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에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장).

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장).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항공, 물류, 에너지, 생명, 의료, 관광, 교육,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글로벌경제거점도시”란 인천광역시가 축적해 온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기반 위에 국내외 다양한 첨단기업 등이 보유한 양질의 자본이 투자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혁신적·융합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세계 경제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른 특구·지구·단지 등(이하 “특구 등”이라 한다)이 조성된 경우에는 특구 등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건설·유지 및 보수, 산업체 이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차원의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인천광역시가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하에서 글로벌경제거점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자체적인 지역혁신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이 규정한 규제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민간위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1. 제7조제6항에 따른 실무추진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분야 육성 및 관련 기업 등 지원 및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 물류 및 디지털·첨단산업 등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립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의 각 항목에 대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

시 구성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관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요건 및 결과의 활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기반조성

#### 제1절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

제13조(공항경제권 구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가, 인천광역시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세계적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

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이하 “국제물류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물류특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도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해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국제물류특구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

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

나 환급한다.

②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19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절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제2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① 정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첨단산업 등”이라 한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항공 여객, 항공 물류, 항공 MRO, 항공 제조, 관광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2.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3. 해운·항만 등 첨단해양산업
4. 수소차,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5. 로봇, AI 등 디지털신산업
6. 바이오, 의료, 의약 등 헬스케어산업
7.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산업

② 정부는 첨단산업 등의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 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2.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정
3. 첨단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
4. 첨단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센터 등의 설립 또는 지정
5.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조치

③ 정부는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산업계 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등에 대한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포함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 및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

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인천광역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등과 관계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천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③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인천광역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2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
2.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기준

제28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절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29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설치 취지를 살려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0조(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 위임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인천광역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3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인천광역시장은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절차 등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4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



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매각, 임대, 위

탁·경영)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3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제1절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제38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

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인천광역시 소재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발전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시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인천광역시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2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학위수여, 교과목이수인정, 산업체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물류·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⑤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법인

②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학교의 운영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규정, 입학기준, 학력인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조례로 정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제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절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제44조(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기업·외국투자기관의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을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위상에 부합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외국기업 및 외국기관의 유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각종 기관·학교·

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인천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장은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및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 접수·처리
3.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및 대중교통 내 외국어 안내 서비스
4.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5. 외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상담센터 설치
6.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49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인천광역시(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접한 다른 시·도의 관할지역도 포함한다) 여행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 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50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내 외국인의 의료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통계·정보의 수집
3.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5.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제51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확정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등 행위의 제한·금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제2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인천광역시장이 제5항에 따른 특구 등을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 또는 복구계획의 제시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등급의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한다.

⑩ 인천광역시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건축물 용도대로 허가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 등”이라 한다)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 증여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54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등에 대해서는 시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정할 수 있다.

제55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56조(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입주기업 등과 입주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부담금 등의 면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정확보



제6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조성사업
2.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3.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등 조직의 설립·지정·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이 법에 따른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비용 지원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3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4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해제
2.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해제
3.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4.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65조(보고·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시행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행사업이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벌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